

K푸드 중심지로 전북건인

익산시, 국물2단계 성공추진... 국토부·전북도 신규 국가산단 현안회의 개최

익산시가 국토부·전북도와 적극 협력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K푸드 중심지로 전북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정현을 시장은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이한준 LH사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현안회의에 참석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가 식품산업용 국가첨단산업 육성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

정돼 완주군 수소특화산단과 함께 전북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국토부, 전북도, 익산시, LH공사, 전북개발공사와 상생협력 체결로 K푸드산업의 혁신성장발전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조성 추진계획,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계획이 발표돼 속도감 있는 사

업진행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시는 △익산 교통안전체협육성센터 건립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백제유공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안회의 후 국토부, 전북도, 익산시, 완주군 LH공사, 전북개발공사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설경민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전북도에 신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임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다.

특히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길을 제공해야 임박취지에 부합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고자 하면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자를 갖출 것,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과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합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지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포함하여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시, 4대종교문화체험... '치유문화 순례지' 로 급부상

'익산 4대종교문화 성지순례관광'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문화 순례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힐링관광지'로 입소문을 참가자 중 78%가 익산의 지역이고, 이중 절반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면서 '순례 관광'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5일 시에 따르면 '4대 종교문화체험 다이아몬드 익산여행'은 신청 개시 한 달 만에 상반기 조기 예약으로 인기를



실감하며, 4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상반기 10회 일정의 막을 내렸다. 4대종교문화체험 다이아몬드 익산여행

은 원불교총부, 내비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미륵사지 등 4대 종교시설 해설을 들으며 방문해 명상과 순례길 걷기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여행은 총330명이 참여 그 중 약 260여명이 익산의 지역에서 참가했다. 이중 서울, 경기, 충청, 세종, 부산 등 전북 외 지역은 149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오성인 묘역 종합관리계획 수립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의 한경봉 의원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성인 묘역의 안정적 시설관리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성산에는 백제 말, 당나라 장수가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거절하자 노인들의 목을 베었으며 이후 주민들은 이 노인들을 '오성'이라고 부르며 추모해 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며 "군산시는 다섯 분 노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12월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고, 그동안 군산시는 1992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예산으로 오성문화재단위원회를 통해 제사를 지내고 있고 2008년 오성문화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민법상 관례에 의한 분묘지권 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군산시 승소 판결이 났다"며 "민원인은 세금에 이어, 군산시 변호사 선임료 약 1천만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도 군산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군산시 관광자원인 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가 없다"며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20년째 관광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매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소송을 거치며 토지주가 팔길 원하는 전체 부지(10,909㎡)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시민이엔 매우 큰 금액이지만 한해 세출예산이 2조를 넘고 2022년 회계연도에만 반납한 보조금이 195억, 순세계잉여금은 797억에 달하는 군산시에 1억3천만 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라 했다.

한 의원은 "오성인의 묘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57%도 사유지"라며 "오성산 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묘와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사유지 무단 점유에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산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은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의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

군산시, 읍면동 사무소 명칭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

군산시가 그동안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가지 명칭으로 불려던 27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 시킨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는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지난 2016년 전체 읍면동 27개소 중 6개 동 명칭(개정·조촌·수송·나원·나은·소룡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데 이어,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도 일괄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신청·접수·처리 등의 행정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7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를 지난 2018년에 신설하고, 이후 긴급지원·심층복지상담·민간자원 연계 등의 맞춤형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청사 현판 유도간판, 정류장·도로표지판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들이 달라진 명칭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명칭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일원화되어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교부세 '36억원' 확보

익산시가 2023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은 지역현안분야 7개사업 28억과 재난안전분야 2개사업 8억이다.

지역현안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원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5억원 △영동시민공원 음압분수 설치 보수보강 5억원 △황등면 상동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 △춘포면도 104호 도로정비공사 3억원 △농촌마을 편의증진사업 2억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시설보수 사업 2억원이다.

재난안전분야는 △용동면 대조천정비사업 5억 △유원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3억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주민과 가장 많이 환경정비 시행

군산시가 5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선유도를 방문할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주변과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는 선유 2구 및 선유 3구의 주차장과 사가 일원 환경정비를 시행했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주민과 주변 상인 그리고 시 직원들 50여 명이 함께해 제초작업과 바다 쓰레기, 민병 폐지 등을 수거했다.

선유도해수욕장은 오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40일간 운영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점검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 등을 마치고 피서객 맞이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국가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방시능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군산=김판관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